

# “10월, 단풍철 산악사고 조심하세요”

### 광주소방본부 가을철 산악 사고 분석 ‘10월 사고’ 월평균보다 83%나 증가 사고 원인으로 실족·추락사고 많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단풍 절정 기인 10월을 맞아 산행 안전사고 주의 를 당부했다. 11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부터 지난해까지 월평균 무등산국립 공원 탐방객 수는 27만 여명으로 월별 로는 단풍철인 10월에 탐방객이 34만 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밀(밀집·밀폐·밀접) 피하 기 등으로 실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시민들이 가까운 산을 찾는 것으로 분석

됐다. 등산객수 증가는 산악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월평균 산악구조 건수는 24건으로, 단풍이 드는 10월은 44 건에 이른다. 사고 원인으로 실족이나 추락 사고가 많았다. 시 소방본부는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이구조구급함·산악 위치표지판 점검·정비 ▲산악지형 숙달과 고립사고 대비 구조 훈련 ▲합동 캠페인 ▲자율 순찰활동에 행정력을



이정자 시 구조구급과장은 “산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 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두 명 이상 함께 등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 ‘음식물 왜 안 치워’ 아버지 폭행 20대 아들 징역 1년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특수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아버지 B씨의 집에서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지난해 7월2일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부터 4월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안방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버지가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쏟아내며 행패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방법·횡성·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에 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머리카락 자르는데 왜 움직여’ 자녀 폭행 50대 父 징역

‘머리카락을 자를 때 움직인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2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3)군의 뒷머리 머리카락을 밀어 자르다 때 아들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쥐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 주거지에서 딸 C(10)양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잠금이 설정된 뒤 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어린 자녀의 신체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독서실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대학생 집행유예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광주의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 7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2차례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공부하던 중 배가 아파 남자화장실에 갔으나 자리가 모두 차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쓸쓸한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3년새 55.8% 급증

### 김원이 의원 “국가차원 안전장치 마련 필요”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158만 9371명으로 2016년 127만5316명 대비 24.6% 증가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붕괴로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또한 급증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는

973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홀몸노인이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홀몸노인의 고독사는 2016년 735명에서 2019년 1145명으로 3년 사이 55.8% 늘면서 평균 사망률 39.3%를 크게 웃돌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독사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홀몸노인 고독

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아직까지도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고독사의 일부만 반영한 수치로 실제 홀몸노인 고독사 발생 건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광주·전남 홀몸노인 해마다 증가...안전장치 마련 필요



대한적십자사 홀몸노인 떡국 배식

광주와 전남지역 ‘홀몸노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시도별 65세 이상 홀몸노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홀몸노인 수는 총 158만9371명으로 지난 2016년 127만5316명에서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016년 3만2436명에서 2017년 3만4378명, 2018년 3만6480명, 지난해 3만8230명, 올해 4만46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남은 같은 기준 각각 9만5096명, 9만7180명, 지난 2018년 10만

284명으로 10만명을 넘었으며 지난해 10만2011명, 올해 10만4860명으로 증가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홀몸노인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이 121만 13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8만8766명, 경북 60만752명, 경남 59만114명 순이다. 홀로 죽음을 맞거나 장례를 치러 줄 가족·친척도 없는 일명 ‘고독사’는 지난 2016년 735명에서 지난해 114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5년동안 총 4170명으로 전체 9734명 중 42.8%를 차지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지만 내년 4월 1일이 돼야 법안이 시행된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